

# 李 정부 민생·경제 성장 전략 논의... “과감한 해법 준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내년도 예산 집행 및 중점 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 받고 민생경제와 직결된 국가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박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산업생산·소비세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제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 간 토론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들은 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며 중간중간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 국무회의 열고 ‘국가 성장 전략’ 토론

### 기업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근절 강조

### 美 관세 협상 관련 “수출국 다변화 주력”

###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 주문도... 토론 생중계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최를 놓고는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의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흔내줘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저도 월급 많이 때려쳐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리 쉽게 때리면 되겠나”라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으니(임금 체불을) 문제 삼은

사람만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끄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지 않나”라고 했다.

법무부에는 “임금을 때려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미등록으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뱉어서는 안 된다. 사업주들이 임금 때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반발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처벌보다 징벌 대상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고 후 책임자) 처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작업 안전시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은 해봤자 30만원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며 “추락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의 곱하기 몇배, 매출의 몇배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 지금 제재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놓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수출 국가·품목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나”

라며 “공적개발원조(ODA)도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부처, 외교, 문화 분야를 종합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 활성화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바가지요금’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산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며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향해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연례 행사로 할인축제를 한 번 해보지”며 기존 시행하던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을 통합한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지시하기도 했다. /뉴시스

## ‘직장인에 점심값 4만원’... 식비 지원 예산 놓고 갑론을박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직장인 식비 지원 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 하는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는 가운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용해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79억원 규모의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와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1000원의 아침밥’과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으로 나뉜다.

아침식사의 경우 백반, 쌀국수, 김밥 등 쌀로 만든 식사를 1000원에 제공(1000원의 아침밥)한다. 5000원짜리 식사라면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 1000원을 지원하면 직장인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점심식사는 근로자 내 외식업종에서 점심시간(11~15시)에 결제한 금액의 20%를 할인해 월 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으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삶의 질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 쌀 소비 촉진 등의 효

### 정부, 내년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추진

### 중기·산단 근무자 5만4000명에 4만원 식비 지원

### 일각에선 ‘직장인 식비 내주는건 포퓰리즘’ 지적

### 정부 “3년간 시범 사업 실시해 효과 면밀히 검증”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직장인 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여론이 시끄럽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을 지원하는거면 몰라도 빚을 내서 직장인 식비를 정부가 내주는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 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지역 식당들은 일제히 메뉴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물가를 안정시켜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점점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해당 정책에 대한 공격에 동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조차 없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청년과 노년층이 많은 현실에서 굳이 직장인 점심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밥값을 깎아 주겠다는 달콤한 구호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과거부터 시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해 기업으로부터 식사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 비용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3년간(2026~2028년)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파악해 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다자무대에 오르는 김정은... ‘다자외교’에도 나설까

### 6년 8개월만의 방중... 여러나라 정상들과 다자외교 할지 관심

### 中 전승절 참석 정상들과 활발한 접촉시 ‘은둔형 지도자’ 탈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戰勝節·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열병식 참석 차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다자무대에 오르게 될 김 위원장이 ‘다자(多者) 외교’를 적극 펼칠지도 관심이이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래 6년 8개월 만에 전승절 열병식 참관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열병식에는 북한 외에 25개국 정상 혹은 지도자급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다. 외교가의 관심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동안 다른 국가 정상들과 약식회담 등 활발한 다자외교를 펼칠 것인가다.

지난 2012년 북한 최고 권좌에 오른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4개국 8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모두 양자회담 성격이었던 만큼 외교의 공간은 한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첫 다자무대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자무대에서 김 위원장의 활동이나 메시지에 이목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외교가에서는 다자외교에 거리를 뒀던 아버지 김정일의 외교적 관례를 답습하지 않고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 행사 계기로 국제 무대에 서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고립국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 사회를 향한 무력 도발을 지속하는 대신 대화나 협상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기대감과도 무관치

않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2일 또는 3일에 공식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 북한과 우호 관계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나 벨라루스 등과 정상회담이나 약식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소련 해체로 독립한 벨라루스와는 1992년부터 수교를 맺고 있으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올해 초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주요 목적이 장기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중·러 결속을 통한 체제 안전 보장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있는 만큼 짧은 체류 기간 동안 타국가 정상들과 활발한 교류나 접촉이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두고 중국 내부 행사 참석일 뿐 다자외교 무대 데뷔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뉴시스

**제25회 영광불갑사**  
**싱싱대추축제**  
2025. 9. 26. (금) ~ 10. 5. 일  
영광불갑사관광지 일원

**주요 프로그램**

- 상사와 in Love 콘서트 (신호법) 9. 26(금) 오후7시
- ‘그럴때 으시쇼?’ (김제동) 10. 4(토) 오후6시
- 상사와 대학가요제
- 상사와 꽃길걷기
- 상사와 달빛아(夜)행
- 브레드 이발소 9. 27(토) 오전11시, 오후3시
- 도래미 프렌즈 10. 4(토) 오전11시, 오후3시

주최/주관 : 영광불갑사상사회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협연합회, 신명중앙회, 농림영력연구부, 영광신문, M:zoo(주)클로리아